

尹 ‘은행 돈잔치’ 비판에…與 “민생 돌보는 것” vs 野 “선무당 칼춤”

與 “美정부도 카드연체수수료 낮춰” “코로나 고금리에도 이자수익 막대”

여야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돈잔치’ 언급과 금리 인하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고금리로 고통 겪는 국민을 위해 대통령이 대출금리를 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통화정책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부위원회는 이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에 나섰다. 질의는 주로 대출금리 인하에 집중됐다. 김종민 민주당 간사는 질의 초반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오늘 6시까지 그 얘기를 계속 답변하셔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지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강민국 의원은 “미국 연방정부는 작년 10월 고물가 고금리를 겪는 미국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를 건별 31달러에서 8달러로 낮춰서 발표했다”며 “우리나라도 고금리로 고통을 겪는 국민을 위해 윤 대통령이 대출금리를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당연히 국민들이 어렵다면 대통령은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시장의 과정에 가까운 구조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4대지주, 4대은행이 거의 다 시중은행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새삼 그런 문제가 제기됐다”며 “제한헌법에 보면 금융을 공영으로 한다는 표현이 있고, 대통령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봐야할 것 같다”고 했다. 송석준 의원은 “고금리로 서민 고통이 이

루 말할 데가 없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 결과적으로 서민 생활이 팍팍해지고 힘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기준금리는 3.5%까지 올렸고, 미국 움직임이 영향이 큰데 최근에는 생각보다 조금 오를 가능성이 많다는 의견”이라며 “한국 시장금리는 상당히 안정화돼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이어 “여러 경제 불확실성이 오면서도 막대한 수익을 내는 금융기관이 있고, 5대은행의 비중이 과도하다는 얘기가 있다”며 “개선 대책을 좀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김희곤 의원은 “코로나19로 고금리가 닥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은행이 반사적으로 막대한 이자수익을 올리고 1조원에 가까운 성과급 보상까지 이뤄지니 비판 여론이 커지는 것”이라며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민생을 돌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내외적 금리 상황 기조와 방향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

지시의 적절성을 따졌다. 강병원 의원은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는 이유는, 예금을 확대해서 대출을 억제하고 과잉 유동성을 회수하려는 목적”이라며 “지금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방치하고 유동성을 오히려 팽창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더 강화되고 고물가로 국민 경제 전체에 엄청난 피해가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대출금리를 낮추려는 건 이해하겠는데, 예금금리를 낮추라고 하면 부동산과 주식은 불안한데 정통에 넣어놓으려는 건가”라며 “금융당국의 그런 얘기들로 시중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예금금리를 낮춘다”고 금융당국 책임을 추궁했다. 이에 김주현 위원장은 “예금금리를 낮추라고 하지 않았다”며 “다만 수신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결국 대출금리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과도한 수신경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라고 맞섰다. 강 의원은 추가 발언을 통해 “그 얘기는 예금금리를 결국 낮추라는 얘기”라고 재차 지적했다.

민주당 간사 박용진 의원은 “이제는 시장에서 결정돼야 하는데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은행들이 대통령과 금융당국의 정책적 지시에 따라 예금금리를 인상하고 은행채를 마구 발행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또 은행채 발행 줄이라고 압박을 하더니 한 달 뒤에는 발행 허용을 검토한다. 은행이 금융위 결정에 오락가락해 시장에서 혼선을 빚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과 금융위가 서민 금융위기의 주범 아닌가. 대통령과 정부가 ‘이자 칼춤 추는 선무당’이자 금융 폭군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금융위가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분명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저희도 통감하고, 고금리 구조 문제를 포함해서 저희가 금융권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눠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 최이슬기자

박홍근 “삼겹살에 소주 이제 서민 친구 아닌 부담” 민생대책 촉구

원내대책회의에서 밝혀 “가게 사장도 난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지난해부터 지속되는 고물가 국면을 우려하면서 “삼겹살에 소주 1병은 이제 서민의 친구가 아니라 서민의 부담이 됐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주로도 속을 달래기 어려워진 국민은 대체 어떻게 살아야할지 막막하다”며 “가게 사장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맥주, 막걸리까지 줄줄이 오르면 곧바로 매출 타격으로 이

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은 지금이 코로나보다 더한 위기라고 한다”며 “매출은 반토막 났는데, 코로나 때 진 빚, 소비 위축, 경제 위기까지 몰려 장사하면서 이렇게 힘든 건 처음이다”라며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도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이런 자영업

자들에게 힘이 되기는커녕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으로 분통만 터뜨리게 하고 있다”며 “7년 이상 영업해온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에서 아예 배제시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와 경제 위기가 압력 7년 이상이라고 피해 가는 것도 아니다”며 “윤석열 정부는 민생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 당장 업력 7년 기준 없애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지원 예산과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열린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거론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역시나 민생에 대한 비상함은 없었다”며 “혹독한 물가 인상 선두에 섰던 공공요금을 잠시 동결하겠다는 것 외에 별다른 방안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이 공공요금 속도 조절을 말해도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인상 불가피하다고 한다”며 “대통령은 말로만 비상한 각오이고 정부는 내놓는 대책마다 빛 좋은 개살구니 국민은 도대체 무슨 정부가 이러냐며 분노만 깊어진다”고 비판했다. 김재환기자

‘구속영장’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

오는 27일 ‘체포동의안 표결’ 합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구서(체포동의안)가 국회로 접수됐다. 국회는 오는 27일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21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이날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 회기 중에는 현행법이 아닌 이상 현직 의원을 수사기관이 체포할 수 없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체포동의안을 검찰로 송부하고, 법무부는 검찰에게서 체포동의안을 받아 국회에 제출한다. 체포동의안은 접수 직후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국회는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만약 72시간 내에 본회의가 안 열릴 경우, 가장 빨리 열리는 본회의에서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여야는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이후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영장심사를 허가할 것

인지 투표할 예정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반대로 기각되면 법원은 별도 심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대표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과 공모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0~2018년 사이 민간사업자들에게 서판교 터널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사업이익의 70%인 6725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성남도개공은 확정이 1830억원만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성남도개공이 그 차액인 4895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 사업 과정에서도 정진상 등과 공모해 민간사업자들에게 사업 계획 정보를 알려주고, 민간사업자와 시공사 등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승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